

# '5·18 상징' 적십자병원 활용안 찾는다



장기간 방치됐던 5·18사적지 제11호인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보존·활용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적십자병원은 미래세대 교육 공간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부상자 치료·자발적 헌혈 장소...광주시, 기념공간 조성 첫 TF 회의 연내 보존 범위 확정 건축설계 공모...옛 도청 등 연계 관광 허브 구축

광주시가 지지부진했던 5·18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에 대한 보존·활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다목적홀(18층)에서 5·18 관련단체, 시민단체, 건축관련 전문가, 광주시 공공건축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담팀(TF) 1차 회의에서는 옛 광주적십자병원 사업방향과 보존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보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각 단체 또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전담팀(TF) 회의때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존범위에 대한 기본(안)이 도출될 경우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한 뒤 사업방향, 규모 등 활용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담팀(TF) 위원들은 이르면 다음 주께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찾아 현장을 직접 둘러 보고 사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전담팀(TF)과 건축기획을 통해 보존·활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최상의 5·18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나눔과

봉사, 대중정신의 상징이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하고 미래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하고, 분산돼 있는 5·18사적지와 옛 전남도청(ACC), 충장로, 광주공원(GMAP), 양림문화역사마을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옛 광주적십자병원(5·18사적지 제11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뤄진 상징적인 5·18사적지로, 광주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해 옛 서남대학교교로부터 2020년 7월 매입했다.

하지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본관과 부속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구조와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강기정 시장 "난립한 '5·18 조례' 통합·정비"

##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협의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정신 계승 등 의미와 방법을 규정한 각종 조례를 정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시민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는 현재 12개 5·18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5·18 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5

·18 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 ▲5·18 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5·18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 게양 조례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5·18 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5·18정신 국

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이처럼 조례들이 난립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는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자체적인 검토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합치고 조례별로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문구나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협의체' 활동 시작

## 26개 기업·기관 참여...국내외 정책·신기술 동향 공유 등

전남도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문 협의체'가 지난 19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문 협의체는 포스코광양제철소, 지에스캡텍스,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26개 기업과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테크노파크 등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기관별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상황과 기업 탄소중립 추진현

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임을 공감하고,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지식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산업부문이 앞장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해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 전남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41억 투입

## 농업법인 등 139개소 선정

전남도가 바·밀·콩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유통환경 개선과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대상자 139개소를 선정, 141억 원을 투입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들녘별 벼 등을 50ha 이상 집단화하고 농업인 25명 이상이 참여한 농업법인이나 농협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해남 29개소, 장흥 16개소, 무안 10개소, 고흥, 보성, 영광, 함평 각 8개소 등이 선정됐

다.

분야별로 ▲참여 농업인 역량 강화·조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사업자 115개소(29억원) ▲트랙터, 콤팩트 등 장비 구매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참여사업자 22개소(84억원) ▲가공시설 구축 등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자 2개소(36억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들녘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은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여름방학 기간 감축 운행

광주 시내버스가 여름방학 기간 운행 횟수를 줄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학생 승객이 많은 101개 노선에서 평일 기준 시내버스 96대(9.6%)를 줄여 운행한다.

여름방학 동안 이용객 감소에 맞춰 에너지 절약

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10분 안팎, 지선 노선은 20분 안팎으로 운행 간격이 늘어나게 된다.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 버스 운행정보(<http://bus.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지방정가라온지

# "농촌에 생활편의시설 도입해 인구 유출 막아야"

## 김호진 도의원 본회의 5분 발언

김호진(민주·나주 1) 전남도 의원은 20일 제 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갖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공공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 최소한의 기초 생활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로 학교, 병·의원, 마트 등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생활이 불편을 겪은 주민들마저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형 생활편의시설 도입은 농촌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전남도와 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수의 창출이 어려운 민간형 편의시설 대신, 공공형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한사회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